

#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0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8.

발 의 자 : 김영호 · 김운덕 · 최민희  
송재봉 · 이기현 · 박희승  
문정복 · 김문수 · 김성환  
한민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동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, 언론의 자유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.

그런데, 언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보나 허위보도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, 복제 또는 재생산됨에 따라 언론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구제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하며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 ·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

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).
- 나.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(안 제17조의2 제4항 신설).
- 다.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,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(안 제17조의3 신설).

##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본문 중 “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·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,”를 “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”로 한다.

제1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인터넷신문에 대한 특칙) ①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

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로 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5조제3항(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
2.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3.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
4.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5.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는 경

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 등의 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인터넷신문사업자의 정정보도청구등의 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인터넷신문사업자의 정정보도 등의 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신 설>

제34조(과태료) <신 설>

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  
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공 또  
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 및  
내용 상단에 정정보도·반론보  
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  
시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3(인터넷신문에 대한 특  
칙) ①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  
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  
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 
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  
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보도한  
기사에 관한 정정보도·반론보  
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 
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  
단에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 
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 
한다.

제3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
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
부과한다.

1. 제15조제3항(다른 규정에 따  
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 
다)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

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
2. 제15조제3항(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

3. 4. (생략)

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

2.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
3.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

4.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
5.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·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 4. (현행과 같음)

<p>② <u>제1항에</u>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